

### 평양개최 남북정상회담, 핵심은?

# 비핵화 대화 촉진

#### 11년만에... 오늘도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3시30분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평양 남북 정상 회담에 돌입했다.

평양 정상회담은 11년 만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평양 방문 첫날부터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19일에도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화 역시 이번이 세 번째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한 두 정상은 5·26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냈다.

#### 중전선언-핵 리스트 맞교환 북-미간 입장차 좁히기 관건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 단계에서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정상회담 3대 의제도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 위협 종식 등이다.

◇ '중전선언-핵 리스트' 맞교환, 美北 입장차 좁히기 관건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비핵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비핵화 의제가 (남북) 정상 간 의제로 올라간 적은 없었다"고 비핵화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낸 북미 간 입장 차를 문 대통령이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미사일 엔진시험장 철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중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고 선(先) 비핵화 전에는 중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물질, 시설 등의 목록을 담은 핵 신고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내느냐가 비핵화 의제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만일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만을 재확인하고 핵 신고 조치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게 제시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 GP 상호철수, DMZ 유해발굴 등 성과 기대... NLL 문제도 진전 이끌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이미 남북 군 당국은 여러 차례의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U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GP 상호 철수 문제와 DMZ 공동 유해발굴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도 진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준비통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합참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 전북도의회 정례회 의정 증계서

## 제2 공공기관 이전, 군산·새만금 반드시 고려해야

#### 김종식 의원, 경제위기 극복 정부 혁신방안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8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혁신방안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시점만을 놓고 볼 때, 장기간 방치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기업들에 대한 위기징후가 나타난 시점을 고려할 때, 군산의 경



제위기는 수년째 방치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과 고용불안, 실업자 증가, 소비 감소,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군산은 경제적 기반부터 와해되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각각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있는 기업들로, 국가기관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역시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혁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에 군산과 새만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이와 함께 김의원은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시스템인 지방교부세 취지를 고려해 군산에 대한 지방교부세 상향 지원을 촉구하면서, 현행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 보조금 지원 역시 완화 내지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분원을 군산에 운영하는 방안과 군산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기 위해 국립군산대학교 전폭적 지원 등 정부차원의 혁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 확대 지원을”

#### 최영규 의원 “국가사업이므로 지방비 부담 줄여야”

국가사업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예산을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확대·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18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국가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대·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사업인만큼 국가 예산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정부가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성 기자

이날 최영규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인프라 구축 국비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국가거점클러스터 사업에 전북도 15%와 익산시 35%, 총 50%의 지방비를 건축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사업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식품시장은 약 6조달러 규모로써, 세계 자동차 시장 1조 3천억 달러, IT 시장 1조 6천억 달러인 것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기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식품시장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국가사업인만큼 국비를 확대·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박희자 의원 “전북형 대안교육 과정 운영을”

도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 균등 기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8일 제35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해 내실 있는

전북형 대안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와 도교육청이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예산지원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교육청은 올해 245명이 다니는 도내 11곳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총 5억 7천 7백여 만원을 지원한 반면, 109명이 다니는 도교육청 운영 공립 대안학교 2곳은 위탁교육기관보다 2배가 넘는 총 12억 6천 6백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김철수 의원 “가축분뇨 지원화 사후관리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 1·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가축분뇨 지원 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는 약 3,200만 마리의 가축에서 683만 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했는데, 약 87%가량이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되고 나머지는 방류처리되고 있다.

또한 올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에 129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1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였고 올해도 30억 원 가량을 투자해 200톤 규모에 이르는 액비저장조 247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일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163개소 액비저장조 중 전혀 가동이 안되는 게 277개소로 전체의 24%에 이르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도 전체의 43%에 해당되는 5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도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매년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 김이재 의원 “치밀한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4)은 18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전라북도가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재 의원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가 안

정된 일자리인데 도내에서는 안정된 일자리 찾기가 매우 힘들어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도내 청년취업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인원은 755명인데,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109명(14.4%)에 불과해 타 시·도에 이전한 기관과 비교했을 때 채용규모가 적어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좀 더 낮게, 좀 더 가까이!

민생을 살피고, 군민에게 좀 더 낮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